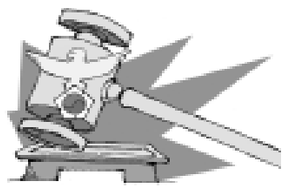

전문가 논쟁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발가벗은 비밀경찰 위상찾기

■일시: 5월18일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2
■사회: 김희수인권실천시민연대운영위원
■발제: 임준태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
이호영건국대대학원석사과정
■토론: 설동본<시민의신문> 취재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동열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연구관, 이영순 민주노동당국회의원, 장경욱민변사무차장,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지춘경 경찰청보안국보안4과2계장

"보안경찰이 공개 토론회,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온 것은 경찰 창설이래처음있는일이다."

<시민의신문>과인권실천시민연대가지난 18일 공동주최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가려졌던보안경찰관계자들이직접토론자로참석했다는점에서경찰개혁과민주주의발전의 성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1시까지 계속됐다. 일단 토론회를 끝내고 서로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토론은그칠줄을몰랐다.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을주제로한이날토론회는양측이한치양보없이설전을벌였다. 보안경찰을비판적으로 고찰한 이호영씨(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교수의발제부터토론은양쪽으로극명하게갈렸다.

설동본 <시민의신문> 취재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이영순민주노동당의원, 장경욱민변사무차장은각각△보안4과와 보안지도관 △보안경찰 교육내용과인적·물적청산△예산△극우적시각 등을 들어 보안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춘경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2계장, 유동열 공안문제연구소연구관, 제성호중앙대법대 교수 등은 이에 맞서 보안경찰을 적극적으로옹호했다.

전체적으로다양한분야에서열띤토론이 전개됐다. 그러나일부참가자들이돌출발언과인신공격을일삼아분위기가과열되기도 했다. 특히유동열연구관은"박종철씨사건은살인이아니다"비전문가인대학원생이 발제하고교수는토론자인데이래서야균형이맞겠느냐"같은발언을쏟아내격렬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

유 연구관의 발언은 비교적 보안경찰의 내면을 잘 반영한 듯했다. 한 참가자는"시대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충돌하면서 유 연구관같은'돌출발언이터져나온것같다"고분석했다. 유연구관은"소련의사회주의전략과 북한의대남전략에맞서지금까지대한민국을 지킨 숨은 공로자가바로보안경찰"이라며"박종철사건같은부정적인몇가지만가지고그렇게얘기하면안된다"고말했다. 일부 청중들은 곧바로 우뢰 같은 박수로 이에 화답했다.

경찰청보안국에서동원한것으로보이는 청중 40여명이 특정발언에 대해 야유를 보내는모습도눈살을찌푸리게했다. 이를두고 오창익 사무국장은"수사부서 인권교육해보면 교육 중간에도 급하게 전화받는 모습을한두번본게아닌데오늘보안경찰들은한가하게몇시간씩앉아있다"며"이것이 바로보안경찰이하는일 없다는 증거"라고 꼬집기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18일 열린 보안경찰토론회는 토론회 내내 보안경찰 비판론자들과 옹호론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사진은 임준태 동국대 교수(왼쪽), 사회자 김희수 변호사(가운데), 이호영 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오른쪽).

박종철 고문치사 살인 아니다?

논쟁1

"보안경찰이'고문살해의 상징 이라고요? 1987년박종철씨 사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그건살인이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부득이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걸 살인이라고 표현하면안됩니다."

경찰측토론자였던유동열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보안경찰이'고문과 살인의 상징 이라고주장하는데도대체살인의근거가뭐냐"며강경한어투로이호영씨의발제문을반박한뒤"박종철씨사건은살인이아니다"는충격적인주장을해파문을일으켰다. 그러나유연구관은오창익사무국장도남영동대공분실을"고문살인의비극적현장"이라고밝혔던것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아대조를이뤘다.

이에대해이씨는"일반인들이남영동분실이지금도있다는얘기들으면무슨반응 보일것같으냐"고물은뒤"일반인들상식이바로'고문과살인의상징'"이라고반박했다. 유연구관은이에 대해"살인의 근거가 뭐냐"고 되물었고 이씨는"사람을 죽인게아니란말이냐"고따졌다.

유 연구관은"대법원 판결을 봐라. 판결문어디에도살인죄는없었다. 알지도못하면서… 깎며입장을굽히지않았다. 급기야 오창익사무국장은"반성도안하면서무슨 혁신이냐"며"뻔뻔하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했다.

오 국장은 보안경찰의 인적청산과 물적청산을강조하면서"지금이라도당장남영동 대공분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부터 경찰혁신을시작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춘경 계장은"좋은 지적"이라며"그런마음으로인권생각하면서보안업무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유 연구관도"보안경찰이거듭나려면철저한반성과혁신 있어야 한다"며"시민단체에서 지적한 것은근거가있다"고자신의발언을마무리했다.

한편 임준태 교수는"국가보안법 개폐, 남북화해 등은경찰이 판단할 문제가아니다"며"남북화해라하더라도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경찰은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고 보안경찰을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통계를보면서보안경찰이정치적판단에 민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정치적 입장 고려해서 법집행하면 역사에또다른오점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

공안연구소 연구관의 무례

논쟁2

지춘경 계장은"보안국은 발가벗었고더숨길게없다"는 말을 여러번 했다. 이는"보안경찰은비밀경찰이고비밀응집체"라는 이호영씨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뜻과 함께 보안경찰의 혁신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계장의선언적 발언을곧바로 경찰측 인사들이 뒤집었다.

토론회가 끝난 후 한 보안국 관계자는"중요하지않은정보라도하나둘공개하다보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생길 수 있다"며정보공개에대해 부정적인입장을 밝혔다."열린보안"을 강조하던유동열 연구관은"이영순의원이자료로배포한보안수사대 현황은 3급기밀"이라며"국가기밀 누설이고 민감한 사안이니까 토론회 끝나고자료집을 회수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고주장해이의원의항의를받았다.

이 의원은"보안경찰 예산 발표는 왜 안되느냐"고 따졌고 유 연구관은"3급 기밀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내가배포한자료는지난해국정감사 공통답변사항으로문제될것이없다"며 유 연구관을압박했다. 유연구관은이에수긍했고자료집회수소동은일어나지않았다. 그러나 유 연구관은 토론회가 끝나고점심을먹는자리에서"법적으로국정감사답변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다시언급했다.

유 연구관은"한국은 안보 후진국"이라며독일연방헌법보호청을예로들었다. 그는"헌법보호청은헌정질서위배가있으면 계좌추적과이메일감청도마음대로 한다"며"한총련 같은 단체가 있다면 주정부 행정명령만으로단체해산할수있다"고강조했다. 그는이어"공안문제연구소가일상적 감시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헌법보호청은 매년 의회에배포하는 백서에 어느 국회의원이 극좌인사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까지 쓴다"고말하기도했다.

이에 대해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방청토론 때"자꾸 독일 헌법보호청과 비교하고 외국 사례를갖대 대면서 논리조작을일삼는다"고유연구관을직설적으로비판했다. 그는"직제에도 없는 보안4과가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같은 일이 독일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유 연구관은"독일은독일의특수한문화가있다"고답하기도 했다.

석사 발제 박사 토론 시비

논쟁3

이날 토론회은 여느 토론회와 달리 건국대 법대 대학원생 신분인 이호영씨가 발제를맡고현직법대교수와국회의원, 변호사들이토론자로나섰다. 가벼운남방차림 과정장차림은여러모로대비를이뤘다. 유동열 연구관은 발제자의 신분을 문제삼아 발제문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리려 했고 이씨의 지도교수인 한상희건국대 교수가 이를비판하기도했다.

유연구관은"토론은균형이맞아야하는데현직교수와 석사과정학생이 발제자로나섰다"라며"균형이안맞지않느냐"고 제기했다.

그는"발제자가전문적식견이있다는검증이 됐느냐"며"이씨의 발제문은'경찰보안부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아니라'비방적고찰 일뿐'이라고공격했다.

그는"젊은석사과정학생이많은자료를 이용해 발표한 것은 높이평가한다"면서도"발표문이사실에근거해야한다"고비꼬았다. 그는"보안경찰존재를부인하면국가안보를 저해하려는 세력에 대한 국가안보 대응역량을마비시킨다"며"조심해서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씨 발제문의 소제목에대해서도"소설제목도아니고. 표현이이게뭐냐"고말하기도했다.

이씨는즉각유 연구관의발언을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학생이니까, 비전문가니까 하는 식으로낙인을 찍어 배제해버리는 의도"라며"결국 발제문의 신뢰성을떨어뜨리려는치졸한비방"이라고비판했다.

그는 이어"내 글은 모두 근거자료를 바탕으로했는데 근거가 없다는말은이해할 수없다"고주장했다. 이에유연구관은"대학원생이라고 문제삼는 건 아니다"며"전문적인사람이라면초등학생이라도괜찮다는게내입장"이라고해명했다.

실상유연구관은"경찰청보안국은국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비밀경찰이며 각종의혹의진원지"라는이씨의발제내용을반박하고싶었던것으로보인다.

이는지춘경계장이"이호영발제에대해 한가지 지적하고 싶다"며"보안경찰은 비밀경찰도정보경찰도아니다"고반박한것에서도 드러난다. 지 계장은"보안경찰을 비밀경찰에 견주어 비교하니까 부정적인 결론이나오는것"이라고말했다.

강국진기자 globalngo@ngotimes.net